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보도자료

| 본부장 윤후덕·인태연 | 수석부본부장 민병덕·박용갑

보도일시	25.05.28.(수)	배포일시	즉시 배포
문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을지원국 / 02-6788-3201, 3631 담당자 : 장정욱 선임비서관 / 010-6788-5732		

“쪽방에서 떠난 이 130명 ...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민생살리기본부 금융주거본부 산하 주거위원회, 동자동 현장에서 쪽방 주민 주거권 보장 위한 정책제안식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동자동사랑방’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 금융주거본부 산하 주거위원회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촉구 및 정책제안식’이 열렸다.

이번 제안식은 동자동사랑방·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동자동공공주택추진주민모임 요청으로,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 책임을 묻고 공공주택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인태연 민생살리기본부 공동본부장, 민병덕 수석부본부장, 변창흠 주거위원회 위원장, 김세용 주거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한나 주거위원회 부위원장, 김현국 민생살리기본부 선임팀장 등이 참석했고, 동자동 주민 차재설(동자동사랑방 공동대표,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부이사장), 김호태(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최갑일(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사업이사) 등 주민과 활동가들이 함께했다.

동자동 쪽방촌은 서울 도심 속 주거취약 지역으로, 2021년 정부가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해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인 곳이다.

계획대로면 임대 1,250호, 분양 200호, 민간 분양 960호 공급예정이었고, ‘선이주·

선순환’ 원칙에 따라 기존 주민 재정착을 보장하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첫 단계부터 멈춰버린 사업 탓에 보상과 착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 130명이 넘는 주민이 쪽방에서 세상을 떠났다.

제안 단체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①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즉시추진 : 2021년 발표 이후 4년이나 지연된 지구 지정을 즉각 완료하고 ‘선이주·선순환’ 실행
- ② 전국 쪽방촌 공공정비 확대 : 서울·부산 등 10곳 중 다수가 미추진 상태로, 전국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확대 및 강제퇴거 금지
- ③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 개선 및 입법 : 전세임대 중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매입형·건설형 임대 확대 및 신청권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법’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인태연 공동본부장은 “지금도 쪽방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미루는 건 선택이 아니라 방임”이라며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첫 단추인 지구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은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그 출발점이 주거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수석부분부장은 “선거마다 사진만 남기고, 정책은 남기지 않았다.”며 “대학 2학년 때부터 철거촌에서 빈민운동을 하며 ‘사람이 살 집을 지어야 사람이 산다. 주거는 생존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계획대로면 내년 입주가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모든 게 멈춰버렸다. 주민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진이 아니라 제도를 남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창흠 주거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고 오랜만에 왔다. 힘을 합치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며 “이제는 전국 10대 쪽방촌뿐 아니라 고시원, 반지하, 비닐하우스촌 등 노후 불량 주거 밀집지역 전반에 대해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부문과 주민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용 주거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서울시와 중앙정부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오세훈 시정, 윤석열 정부 시기에 멈춰 있다”며 “동자동뿐 아니라 영등포 등에서 사

업을 진행하고 협약도 진행했지만 멈춰 있는 상황이다. 계획은 다 가지고 있으니 새 정부에서 추진하면 된다.” 고 말했다.

주민들은 기존 전세임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매입형·건설형 공공임대 확대, 보증금 지원체계 개선, 홈리스 신청권 보장 등 실질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자동사랑방 관계자도 “더 이상 쪽방 주민의 주거권을 종이 위의 약속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임대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나도 내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음식도 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늦어진 4년이 뼈아프다. 이번에는 공공개발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동자동 사례를 넘어 대전·부산·영등포 등 전국 쪽방촌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확대도 함께 제안되었다. 특히 서울 돈의동·창신동, 인천 만석동, 대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주택 대신 민간정비 사업이 우선되며 강제퇴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정부는 2020년 기준 전국 10개 쪽방촌을 대상으로 공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진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관련 제도 법제화 요구도 담겨있다.

정책제안식 이후 참석자들은 쪽방촌 현장을 둘러보며 열악한 주거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 금융주거본부 주거위원회

[행사 사진]

